

2020년 미국 고용전망

Randall W. Eberts (미국 W.E. 업존고용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20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미국 경제는 이 나라에서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에 직면하게 되었다. 바로 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다. 미국 역사상 하원이 대통령을 탄핵한 경우는 단 두 번에 불과했고, 다른 한 명의 대통령은 하원 심의가 종료되기 전에 사임하였다. 2019년 말, 미 하원은 두 가지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결의하였다. 첫 번째 혐의는 재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주당 후보를 무너뜨리는 일에 우크라이나까지 가담토록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두 번째 혐의는 탄핵 심리에서 증언을 막고 하원의 요구에도 관련 문건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의회의 절차를 방해한 점이다. 일단 이러한 혐의 내용이 상원에 상정되면, 상원은 헌법에 정한 의무로서, 하원이 현 대통령에 대해 제기한 두 가지 혐의의 사실 여부를 결정하는 배심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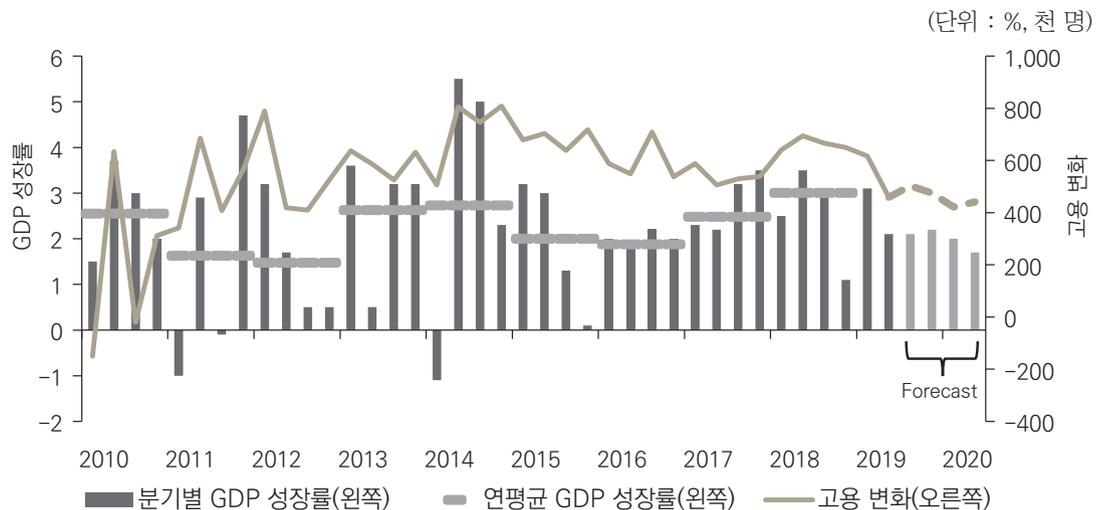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이 공화당 출신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실제로 이제까지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탄핵심판에서 기소된 경우는 없다. 그러나 탄핵 절차와 관련된 혼란과 심각성이 국정 및 경제 운용의 여러 중요한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하원의 탄핵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이미 민주당 다수의 하원과 공화당 다수의 상원으로 분열된 미 의회는 말 그대로 정체 상태였다. 최근 여론 조사에 의하면, 정당과 관련 없이 미 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낮게 나타났는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중이 신뢰한다는 응답의 세 배에 가까웠다(2019년 1월 갤럽 조사). 이러한 상황에서 하원과 상원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상원에서의 탄핵 처리 방안을 놓고 논쟁을

별이고 있으며, 하원 의장은 아직 탄핵 혐의 내용을 상원에 제출하지 않아 상원에서의 심판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¹⁾

설상가상으로 2020년은 미국 대선이 있는 해다. 미국 역사에서 대선이 열리는 해에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된 적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2월부터 조기 예비선거와 정당대회가 시작되면서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되어 탄핵이라는 엄중한 상황은 더욱 더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첫 번째 탄핵 혐의는 대선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선거전 초반부터 이미 이 혐의 내용과 탄핵 사실 자체는 모든 후보들이 가두 연설에서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탄핵 과정이 아직까지 대중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이전에 트럼프에게 투표했던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지지도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계속 지지자로서 자신의 진영에 남아 있도록 선거전에 전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는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지난 50년간 최저치인 3.6%를 기록했으며, GDP는 지난 2분기 동안 연 2%에 가까이 성장하였

[그림 1] GDP 성장률 및 고용 변화: 추세와 2020년 전망치



자료 : BLS and BEA.

1) 편집자 주: 이 글은 2020년 1월 9일 작성되었고, 이후 1월 15일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승인되어 16일 상원의 탄핵심리절차가 시작되어 부결되었다.

고, 주식시장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여러 전망자료에 의하면, 2020년의 경제침체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림 1]은 2010년 이후의 GDP와 고용 동향을 보여준다. 이 그래프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은 2020년의 GDP 및 고용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예상 성장률은 예년의 범위 내에 있다. 이와 같이 2020년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 경제는 불안정한 무역 협상, 미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 천정부지로 치솟는 연방 부채 등의 여러 불확실성을 헤쳐나가야 할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 역사상 가장 장기적인 경기확장 국면에도 불구하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로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경기호황의 결실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 탄핵 절차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인가?

탄핵 절차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인가? 짧게 답하자면, 그렇지 않다. 어느 특정 시점에 함께 경제에 닥친 모든 사건들을 낱알이 풀어놓기는 힘들지만, 역사상 탄핵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다. 단기적으로 경제불안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경기확장 국면이 한시적으로라도 중단되는 일은 없다.²⁾ 모든 탄핵 사건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고유한 요소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경제지표 변화의 원인을 탄핵에만 돌리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직전에, 미국은 장기적 침체를 겪고 있었고 금본위제를 폐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무역 전쟁과 세금 인하라는 두 가지 주요 정책 때문에 탄핵이 단독으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탄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요소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가에 있다.

Botham(2017)은 미국의 탄핵 3건과 2017년 대한민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및 파면을 포함하여 여러 탄핵 사건이 경제에 미친 영향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연구한 결과를 발

2) Craig Botham(2017), "The Impact of Presidential Impeachment on Markets," Schroders, Ju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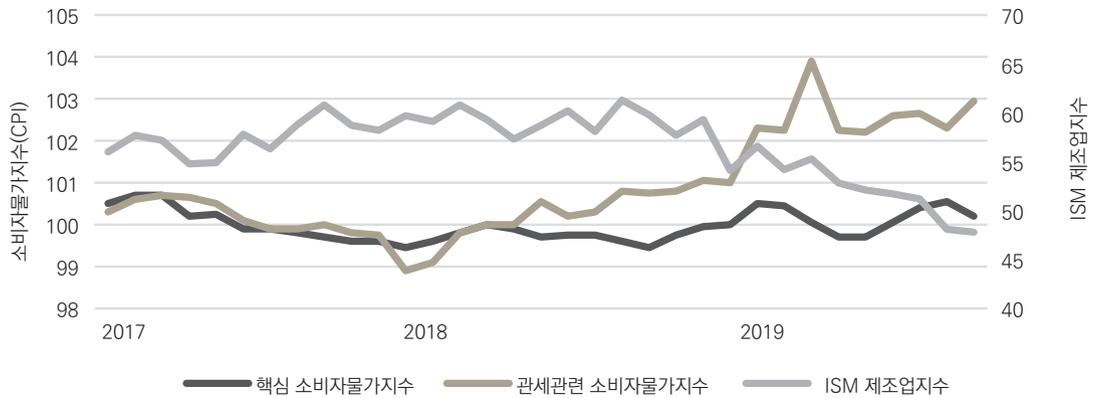
표하였다. 이 연구에서 Botham은 탄핵이 경제에 미치는 어떠한 파급효과도 찾지 못했다. Botham은 개별 탄핵 사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탄핵이 향후 정책 변화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보았다. 탄핵이 경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탄핵으로 불안정성이 가중될 수 있지만 기소가 되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오히려 더 가속화될 수 있다. 반면에 탄핵이 필요한 정책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된다면 기소는 향후 경제 성장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트럼프에 대한 탄핵의 경우, 아직까지는 시장과 경제가 거의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경제는 연평균 2% 정도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고용은 2010년 10월부터 연속 110개월째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고용 증가에 따라 실업률은 3.7% 미만에 머물고 있다. 올해 경기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무디스 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는 미국 경제의 향후 6개월 내 침체 가능성을 매월 발표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발표된 수치는 10%다.

이러한 밝은 전망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여 왔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관세부과로 상품 가격이 인상되면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중국은 미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며, 양국은 현재 이미 한동안 무역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로 협상이 지속되는 중에도 서로 관세를 높이거나 그러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관세 인상 및 위협을 트럼프의 교섭 전략으로 본다. 하지만 중국은 그러한 전술에 넘어가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무역 협정, 적어도 1차 무역 협정이 곧 최종 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³⁾ 중국 정부는 미국의 탄핵 절차와 대선이 열리는 해라는 점에서 미국의 무역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중국은 선거 결과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 미국의 기업들은 무역 전쟁이 신속히 종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게 되고 따라서 미국 경제는 주춤하고 심지어 위축될 수 있다. 트럼프는 2019년 10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당장이라도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장담해 왔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결론도 얻어내지 못했다. 중국은 탄핵 절차와 선거가 진행되는

3) 편집자 주: 이 글은 2020년 1월 9일 작성되었고, 이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그림 2] 핵심 및 관세관련 물품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ISM 제조업지수



자료 : BLS and Institute of Supply Management. CPI은 2018년 2월을 100으로 하며, ISM의 경우 50 미만은 제조업 부문의 위축을 의미함.

동안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2021년까지는 어떠한 무역 협정도 체결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 수입 비용 증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 신뢰 및 투자 위축을 야기한 무역 전쟁의 효과가 이미 제조업 부문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2019년 12월 미국의 제조업 활동은 지난 1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큰 폭으로 위축되었다. 미국의 공급자관리협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ISM)가 발표한 지수는 2019년 12월에 47.2로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2009년 6월 이후 최저치이며 5개월 연속 위축을 의미한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물품(핵심 물품)에 비해 관세 대상 물품(관세관련 물품)의 비용이 더 높으며, 이에 따라 ISM 지수로 측정된 제조업 활동은 위축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 지수의 수치가 50 미만이면 제조업 부문이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8년 후반 이후로, 미국의 공장 생산량은 둔화되고 이 부문의 신규 고용도 정체된 상태다. 제조업의 인력 수요가 줄어들면서, 2018년 말 수준을 향해 상승하기 시작하던 임금 인상률도 낮아지고 있다.⁴⁾ 제조업 임금은 평균적으로 다른 부문의 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제조업

4) New York Times(2020), "U.S. Manufacturing Slumps as Trade War Damage Lingers," by Ana Swanson and Jeanna Smialek, January 3.

근로자가 미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라 할지라도 제조업 임금 증가의 둔화는 나머지 경제 분야의 임금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경제후퇴의 주된 원인으로 정책 과실을 지적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연방 부채와 함께 관세 문제도 엄연히 정책 과실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2019년 11월 의회에서의 증언에서 미 행정부와 의원들에게 “연방 예산은 현재 지속불가능한 상황이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미 높은 데다가 점차 늘어나는 부채로 인해 경제성장은 지체될 수 있으며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연준의 개입은 더욱 힘들어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역 전쟁으로 연방 세입은 줄어들었고, 2017년 감세를 통한 강력한 경기 진작 방안이 여전히 운용 중인데도 기업의 신규 장비 및 기계 투자는 제한적이다.⁵⁾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로 신규 구매건에 대해 유리한 세제가 마련되었음에도 기업들은 신규 장비 구입에 적극적이지 않다. 많은 기업들은 이렇게 주저하는 이유로 미 행정부의 무역 전쟁 장기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꼽고 있다. 재정적 폭풍우를 몰고 올 구름이 시야에 드러난 현 시점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연간 2%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 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의 정책 과실에 머물지 않고(추가적으로), 백악관이 2020년 11월 대선을 맞아 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 감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새로운 보도가 전해지고 있다. 또한 뉴욕경제제클럽(Economic Club of New York)에서의 무역 정책 관련 연설을 통해 트럼프는 중국과의 1차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게다가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미국에 “끔찍한(terrible)” 무역 장벽을 두고 있으며 이는 “여러 면에서 중국보다 더 심각하다”고 비난하였다. 트럼프는 미국을 “제대로 쳐우하지 않는”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하였다.⁶⁾

5) 연방준비이사회 제롬 파월(Jerome H. Powell) 의장이 2019년 11월 13일 워싱턴 D.C. 미국 의회 합동 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한 내용이다.

6) 2019년 11월 12일 뉴욕경제제클럽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다룬 뉴욕타임즈 애나 스완슨(Ana Swanson), 매기 하버만(Maggie Haberman), 지나 스미앨릭(Jeanna Smialek) 기자의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유지 및 미국 경제 ‘호황’ 자신(Trump Renews Tariff against China and Touts U.S. Economic ‘Boom’)」이라는 기사에서 발췌하였다.

■ 규제완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는 공약으로 경기 진작을 위한 기업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 분야에서 자신이 세운 업적을 자랑하고 있지만 자신의 성과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초당적 연구소인 뉴욕대학교 법대의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Integrity)'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관련 조치들은 90% 이상이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기각되거나 소송 이후에 철회되었다. 이전의 행정부와는 대조적으로, 현 정부는 행정조치에 이의가 제기된 사건의 경우 약 69%의 승소율을 보여준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대통령의 의제를 대체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일반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고 지나간 분쟁건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연달아 패배를 안겨주었다. 이러한 사건들 상당수에서,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거나 자의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들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정책무결성연구소가 작성한 통계에 의하면, 규제완화와 관련된 68건의 사건 중에서 4건만이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흥미롭게도, 자신을 민주당원이라고 밝힌 판사가 심리한 사건이 공화당원으로 밝힌 판사가 심리한 사건보다 훨씬 더 많아 38건 대 10건이었는데도, 승소한 4건 중 2건은 민주당 소속 판사가, 나머지 2건은 공화당 소속 판사가 주재한 사건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한 사건으로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들 중에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고자 오마바 행정부 당시 채택했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에 반대한 대법원 판결, 2020년 인구총조사에 시민권 질문 항목을 추가하려 한 행정부의 시도를 차단한 연방법원의 판결, 무상피임 기회를 제한하는 신설 규정의 효력을 정지한 판결 등이 포함된다. DACA 판결에 더하여, 연방법원은 이민과 관련된 8건의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한 사건 중 2건은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통해 탄광, 더 나아가 탄광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감독 규모를 줄이려는 행정부의 시도를 막을 수 있었다.

■ 2020년 대선 후보들의 노동 현안 관련 입장

2020년은 대선이 있는 해로서, 4년 전 공화당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2020년 1월 2일 현재, 14명의 민주당원과 1명의 공화당원이 대선 경선에서 사퇴했음에도 무려 14명의 민주당원과 3명의 공화당원이 여전히 대선 후보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전미 토론회 참여 자격조건을 엄격하게 부여하였으며, 이 조건에는 국가 및 주 차원의 여러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를 통한 수치와 독자적 기부자를 통해 모금한 선거자금 액수가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후보 중 조 바이든(Joseph Biden), 피터 부티지지(Peter Buttigeig),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등 5명만이 다음 전미 토론회에 참가자로 초청받았다. 현재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조 바이든이 전국 여론조사 득표율 평균 27%로 선두에 있으며,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이 각각 19%와 16%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부티지지와 클로버샤의 득표율은 10% 미만이다.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현재 가능성이 보이는 유일한 후보다.

노동 현안에 대한 공화당의 입장과 비교해 볼 때, 민주당 후보들은 최저시급 15달러와 유급 육아휴직을 지지하는 등 근로자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활동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 1월에 개최될 전미 토론회에 참가하게 될 5명의 후보 중 클로버샤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스스로를 노동 개혁가로 평가한다. 이들은 노조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언숍 규정이 있더라도 비조합원의 조합비 납부 거부를 허용하는 단결강제금지법/노동권법('Right to Work' law)을 금지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결정 시 근로자의 과거 급여 이력을 기반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며, 단결권을 각 근로자 및 계약직에도 확대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조 바이든은 노동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노조 조직화에 개입하는 기업 임원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부여하는 등을 공약하였다. 버니 샌더스는 현재 미국의 지배적인 단체교섭 형태인 개별 기업 단위 교섭과는 달리 독립위원회가 단순히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전체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임금과 기타 수당에 대한 최저 기준을 결정하는 산별 단체교섭(sectoral collective bargaining) 체제의 수립을 촉구하여 왔다. 또한 샌더스는 모든 정부 근로자에게도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기업이 언제라도 어떠한 이유로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임의 고용을 폐지하고자 한다. 엘리자베스 워런은 산별교섭을 인정하고 거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단결권 부여를 주장하는 등 샌더스의 공약과 매우 유사한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워런은 수십억 달러 자산규모 기업의 경우 이사회 의석의 40%를 근로자에게 할당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히 주주만이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이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피터 부티지지는 가사근로자 및 농장근로자에게도 미국 노동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노동법상 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클로버샤는 노동 현안에 있어 가장 소극적인 편이다. 다른 유력 후보들이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내세운 개념들을 상당수 지지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단언적이지는 않다. 클로버샤는 노조와 교섭권을 지지하지만 노조 가입을 용이하게 할 방안이나 단결강제금지법/노동권법을 무산시킬 계획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노동 현안은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법 이행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안전 기준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법 이행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2019년 여름 아코스타(Acosta) 노동부 장관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신속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한편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는 광산 작업장 감독을 축소하고 도축장의 가동 속도를 높이는 제안을 하는 등 주요 안전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비난에 더하여, 노동부 장관 취임 전 세간의 이목을 끈 사건에 개입했던 행적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아코스타를 노동부 장관에서 해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유진 스칼리아(Eugene Scalia) 신임 노동부 장관이 취임했다고 2020년 노동부 최우선 목표가 바뀐 것은 아니다. 노동부의 7대 중점 과제는 수습제 확대,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급여를 인상하는 초과근로 규정 유지, 초과근로수당 계산을 위한 주당 근로시간 규정 개선, 공동 고용주(joint employer) 규칙 명료화, 종이를 사용하지 않은 온라인 수당 계획 공시 허용, 팀 공유 규정 변경이다.⁷⁾ 이 중 일부는 수년간 노동부가 예정하고 있던 것으로 기존 법규나 절차를 변경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는 전반적으로 약간의 비용 절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7) Lisa Nagele-Piazza, J.D.(2019), "7 Labor Department Priorities for 2020," SHRM-SCP, November 12.

■ 주와 기타 지자체의 노동법 동향 개요

주(그리고, 때로는 시)는 새로운 노동 법률 또는 절차의 시험장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충분히 강력한 지지를 얻거나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 국가 차원에서 채택되기도 한다. 최근에 일부 주에서 통과된 정책방안들의 일부가 몇몇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주요 강령으로 채택된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의회 법안 5호(Assembly Bill 5)는 기업들에게 깃(gig) 노동자를 포함한 독립 계약자들을 근로자(employee)로 재분류하여 여러 유형의 보상 중에서 특히 건강보험과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여러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지지하는 내용과 유사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예로 뉴저지주의 과거 급여 이력에 대한 질문을 금지하는 법안(의회 법안 1094호(Assembly Bill 1094))을 들 수 있는데, 사용자가 취업 희망자에게 임금 및 보상을 포함한 급여 이력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관행이 폐지되면 임금형평성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과 클로버샤는 이 정책을 자신들의 공약에 포함시켰다. 오리건,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의 일부 주에서는 직장 여성 지원을 위한 추가 법률을 시행 중이다. 오리건주 하원 법안 2341호(House Bill 2341)는 모든 조직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병원 진료가 필요하거나 그로 인해 작업장에서 제약을 겪는 근로자들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상원 법안 142호(SB142)에 의하면,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유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워싱턴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간 최장 18주의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family and medical leave)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이후로 연방 최저임금은 전혀 인상되지 않아 시간당 7.25달러에 머물고 있지만, 주 또는 지역 차원에서는 솔선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경우가 많다. 저임근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전국고용법프로젝트(The 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에 의하면, 2020년 1월부터 21개 주와 26개 시 및 군(county)에서 생활비 인상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거나 임금 하한선을 조정한다.⁸⁾ 2020년 초 이후로는, 4개 주와 23개 시군

8) 2020년 1월 8일 기준 raisetheminimumwage.com의 National Employment and Law Project.

에서 또 한 차례 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7개 주와 17개 시군에서는 최저임금이 물가인상률에 자동 연동되도록 설정해 놓았다. 15개 지자체에서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 이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뉴욕시는 근로자 11인 이상인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였다. 워싱턴 D.C.는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목표로 2020년 7월에 최저임금을 1달러 인상하기로 하였다.

■ 요약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탄핵 소송, 중국 및 기타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무역 전쟁, 대통령 선거는 아마도 2020년 전반에 걸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제가 대체로 강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향후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올해 미국 경제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는 탄핵 절차가 경제성장의 큰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고 주식시장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게는 현행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있다. 반면에 무역 전쟁은 그로 인한 비용 증가 및 수요 감소가 제조업 부문의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이미 GDP 성장률을 침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심각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탄력성을 보이고 있어 당황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착실하게 지속되고 있고, 실업률은 사상 최저이며, 구직자보다 구인 중인 일자리가 더 많고, 인플레이션은 억제된 상태며, 주식시장은 지속적인 상승세로 임금분포에서 최상위에 위치한 사람들의 부를 늘려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인가? 많은 이들은 적어도 향후 1년간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자신 있게 예견하고 있다. **KL**